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2017. 1. 20 (금) 발신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문 포함 총 5 쪽)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ngo8518@pspd.org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4725-9177 jopan@kfem.or.kr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010-3724-9438 mzzlim@hanmail.net

보도자료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 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 폐지 반영돼야"
- 촛불집회 등에서 받은 18,759 명 국민 서명 들고 오늘 열리는 법사위 법안 심의 방청
-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 필요... 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에 권한 줘야"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7. 1. 20(금) 09:4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 : 가습기살균제 유족과 피해자들, 환경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이정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 진행 : 장동엽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대응TF 선임간사)
- 발언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의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1. 가습기살균제 유족과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오늘(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오전 10시부터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함께 방청합니다.

2.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안법안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 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 폐지, 피해 판정 기준 및 관리 방안 개선 등을 요구합니다.
3.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벌어진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 시민 18,759 명의 서명을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들고 들어가 방청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한 시민들과 함께 법사위 심의과정을 방청한다는 의미입니다.
4. 이 자리에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이 함께합니다. 또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도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해 자신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 발의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밝힙니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사회적참사특별법안'상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특조위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특별검사 구성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 붙임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문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즉각 제정하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1월 15일 현재까지 모두 5,380 명, 이 중 1,122 명이 사망자다. 올 들어 피해자는 39 명, 사망자는 10 명이 늘었다.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듯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에 살인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다국적 기업인 옥시,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살인기업들의 경영진과 관계자들, 옥시 측의 증거 조작에 가담한 전문가들만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검찰의 능력 부실수사 덕을 본 이들 대다수는 1심에서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1994년 죽음의 원료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판매·공급한 SK케미칼과 이를 받아 살인제품을 판 국내 재벌들은 이제껏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살생물제 참사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관료들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정부 책임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도, 살인기업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공정위도 온갖 핑계를 대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언론들을 통해 '승소했다'고 알려진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은 이미 망해 사라진 세퓨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은 막혔고, '책임 없다'는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된 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합의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회를 향해 절까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13일, 제4차 피해 판정 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하루 빨리 치료를 비롯해 온갖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향해 '3·4단계' 딱지를 붙이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해 버렸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 출연조차 거부했다. 피해 규모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고 살인기업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국회 특위도 내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피해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안 내용에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구제기금'을 살인기업들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순 없다. 이사건에 대해 책임 큰 정부도 기금을 내야한다. 이 법안이 피해 규모를 낱알이 밝혀 제대로 된 피해 구제로 이어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제껏 그래왔듯 1천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들이 임의로 제시하는 배상 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 주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립할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왔던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조차 소급 입법과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해 온 국회가 '위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징벌적 배상 조항은 더 이상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내용이다.

피해 신고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폐 손상 이외에 다른 신체 부위 손상, 아직 알 수 없는 잠재적·중장기적 피해가 드러날 개연성도 매우 높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건강 이상 경험자가 최대 2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다수 참사들과 달리 수백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날 지 가늠할 수 없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까닭이다. 환노위가 제출한 법안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피해 발생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이 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피해구제기금 조성 규모에 상한액을 두어선 안 된다. 계속 늘어만 가는 피해에 대처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법안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 조항을 스스로 우겨넣었다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인기업들의 편에 서겠다는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월 15일 현재 신고된 사망자만 1,122 명이다,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이 더 늘 수도 있다. 제조사 출연 기금 한도를 1천억 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 정부는 피해 판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껏 기준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관리 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부처의 편의대로만 이뤄졌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피해 판정 단계의 구분과 관리 방법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1~4단계 구분을 유지해 혼란은 피하되, 판정에 따른 불합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우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대참사다. 살인기업들의 탐욕 앞에 이를 통제해야 할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체계와 언론의 감시 기능조차도 완벽히 무너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사실상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 앞에서 '기존 법 체계', '위헌' 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와 가슴기살균제 참사...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무능으로도 모자라 진상 규명조차 가로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공범임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한다. 피해와 진상을 낱알이 밝혀내지 못한 '사회적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국회가 '피해자 중심의 가슴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함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외면한다면, 참사의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들과 뜻을 함께해 온 촛불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7. 1. 20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슴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